

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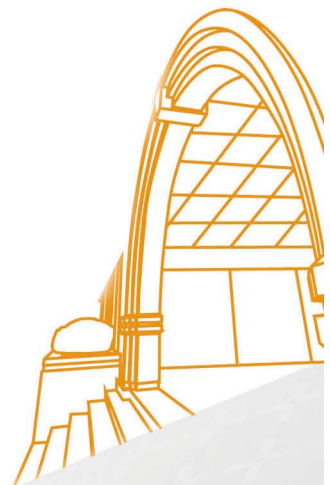
## 2030년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정책, 가족법의 방향과 과제

수행과제명 · 가족의 미래와 여성 · 가족정책전망(Ⅲ)


과제책임자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2030년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정책, 가족법의 방향과 과제\*

수행과제명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Ⅲ)

과제책임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41

 e-mail: hkchang@kwidimail.re.kr

### 요약

본 연구는 4개년 기획연구(2011-2014)의 3차년도 과제로 추진됨. 1차년도(2011년) 연구는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예측 요인을 발굴함. 2차년도(2012) 연구는 1차년도(2011) 연구에서 도출된 가족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및 시나리오기법으로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함. 2013년 3차년도 연구는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를 중심으로 돌봄정책, 소득보장정책, 가족법 영역들에서의 정책 적합성을 점검하고, 2030년의 여성·가족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아젠더를 도출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김수완(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Ⅲ).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 본 연구는 4개년 기획연구(2011-2014)의 3차년도 과제로 추진됨.
  -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예측 요인 발굴 (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가족가치)이 이루어졌음.
  - 2차년도(2012) 연구에서는 1차년도(2011)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변동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및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함.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 중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가장 회구하는 시나리오는 가족돌봄과 경제적불평등이 적고, 개인중심가치가 증가하여 가족구성원간 규범적 부담은 적고 친밀성이 강화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the loose but intimate family scenario)로 나타남.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정책, 가족법 영역에서의 대응 정책들의 필요성이 강조됨.
- 2013년 3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영역인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에서 가족변화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면밀히 진단, 분석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현재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 정책영역들과 시나리오와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미래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 아젠더를 도출하는 것임.

## 2 연구결과

### 가.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개념화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에 대한 접근 : 가족관계별 의무와 친밀함 정도(Milar & Warman, 1996)

- 가족의무의 느슨함 : 법과 제도 내에 내재된 가족의 의무를 부부/파트너간, 미성년자녀-부모간, 성인자녀-노부모간 관계로 구분하여 돌봄의 사회화 구현, 경제적 불평등감소, 개인가치의 존중

가족관계	느슨함: 가족의무의 느슨함
부부, 파트너간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는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음 [가족법] 법적 혼인관계는 느슨하게 정의됨
미성년자녀- 부모 간	[돌봄]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 지역사회 등 사회주체들의 협력수준이 높음 [소득보장] 아동양육에 대해 상당부분 국가가 지원함 [가족법] 미혼,이혼시 파트너간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자녀지원은 강화
성인자녀- 노부모 간	[돌봄]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지원수준이 높음 [소득보장] 노인의 탈가족적·독립적 소득보장* [가족법] 성인자녀-노부모간 법적 부양범위 최소화

- 가족관계의 친밀함 : 규범, 의무, 법적 책임에 의한 관계유지에서 선호,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 유지로 변화하여, 함께 살지만 당사자 중심적 삶을 사는 가족

가족관계	친밀함: 가족관계의 친밀함
부부, 파트너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형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호에 의한 친밀한 부부관계 유지</li> <li>- 극단에 도달하기 이전에 법적 관계 해소 가능하여 법적 관계 해소 후에도 일정한 동료관계 유지</li> </ul>
미성년자녀- 부모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과 시간압박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더라도 자녀양육이 가능</li> <li>- 경쟁적 사회 내 안식처로서 미성년 자녀와 부모간 애착과 친밀성 향상.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는 동안 충실한 관계 유지</li> </ul>
성인자녀- 노부모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자녀·노부모간 부양과 돌봄 부담이 점차 사라져 오히려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 형성</li> <li>-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적 친밀성보다는 관심과 애정의 수준이 커지는 '질'적인 친밀성 형성</li> </ul>

## 나. 2030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영역별 정책이슈 도출

▣ 2030년 한국 가족미래시나리오의 주요 환경(인구, 경제, 정치, 과학기술) 전망과 가족모습

환경	2030년 가족모습	
인구	노인세대의 분리 및 노인가구 증가	인구의 고령화로 가구규모의 축소와 독거노인가구 및 부부노인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세대와 성인자녀세대 분리의 가속화와 성인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재편하게 하는 동력과 동시에 동년배 노인 비혈연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파트너관계의 다양화	혼인, 이혼, 양육 등이 사회적 규범보다는 당사자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혼인의 '적령기' 개념 약화와 연령규범을 벗어난 결혼이 증가하는 한편, 재혼에 대한 사회적 터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적 혼인의 범주 내로 들어오지 않는 사실혼관계 등 다양한 파트너관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성문화가 개방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취향'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강화되면서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혼인관계의 민족적 기반을 흔들로서 규범화된 결혼문화를 변화시킬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혼인·양육의 분리와	혼인관계 다양화로 '자녀재생산'의 전제조건으로서 제도적 혼인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제도적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있거

환경	2030년 가족모습	
	자녀애착의 강화	나 제도적 혼인관계를 넘나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이 늘어날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사회적 규범이 아닌 자녀와의 친밀성 형성으로 바뀌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애착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저출산 경향에 따라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자녀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경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따른 생계형 근로 (고령자포함) 증가와 돌봄의 공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들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이주노동자 가구, 저소득1인가구, 노인가구 등)에게 있어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들 빈곤가족의 생계형 노동참여는 가정 내 돌봄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생계형 고령자 근로의 증가는 자녀세대에 대한 돌봄지원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맞벌이가족 증가와 일가정양립 욕구 강화	경제력을 확보한 여성의 가족 내 협상력이 증가하게 되고 남성 배우자에 대한 동등한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남성의 일가족양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고령화의 심화는 노부모 돌봄의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날 것이며 노인들 스스로가 가사조력자 및 손자녀양육자로서 역할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형태는 3세대 동거 또는 세대 독립형 확대가족주거 등의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정치	생활밀착적인 일가정양립 양상	모든 가족구성원이 각자의 생애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고 자원이 분배되어 생애전반을 아우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양육받을 권리를, 부모들은 부모역할수행의 책임과 모부성보호, 근로자로서의 경력유지를 통한 모성권리 부성인식과 함께 동등한 돌봄참여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돌봄방식의 다양화와 지역공동체 역할의 활성화	가족규모 축소 및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가 드러날 것이다. 고도의 기술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점차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대면적 접촉 또한 급속히 줄어들 것임으로 다양한 정서적, 관계적 지원 방법들이 활성화 될 것이다. 노인세대 부양에 있어서는 사회제도와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기반이 되는 가운데 일상적인 부양이나 도움은 부부간이나 노인세대내 교환을 통해 충족할 수 있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가족 축은 부부 중심의 축으로 이동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열릴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주거와 '3세대 따로 또 같이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설계가 증가할 것이다

환경	2030년 가족모습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	다양한 생애단계에서의 가족 형성, 확대, 해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노력과 관련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과학 기술	가족생활의 기술화 증가	공공부문의 발전된 맞춤 의료와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45세대 공존 가족이 주요 가족형태로 부상한다. U-health care의 발전은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웠던 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1-2인 가구를 탄생시킨다. 다세대 가족의 경우 모든 돌봄 기능을 공공부문이 맡아 수행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모 자식 사이의 유대관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도 잦아진다(가족의 경영권, 유산배분 등). 홈 네트워크 기술 발달은 스스로 돌보기 어려웠던 노약자, 장애인의 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원거리 건강체크, 화상대화 등).
	전통적 부모역할/젠더 역할의 변화	보조생식기술의 발달은 시험관 아기를 둔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를 증가시킨다. 이는 ‘수유’공급이 불가능한 가족들의 증가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제도 서비스 확대 개편을 요구하고 이는 가족 내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변화시킨다.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가정에 음성인식 기술을 갖춘 이동형 육아·가사 도우미 로봇이 보급된다. 이러한 육아 지원방식은 부모역할 관련하여서 성평등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 등과 같은 근무의 유연성과 맞물려 ‘가족을 위한 시간을 누가 더 많이 쓸 것인가’를 둘러싼 부부, 가족구성원간의 협상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다세대가족의 공존과 느슨한 가족관계	맞춤형 의료의 보급,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으로 다세대 가족이 모여 살게 되지만 가족구성원들은 각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부양/돌봄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가족원들 사이의 유대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일례로 유비쿼터스 스마트홈의 구축으로 노인의 건강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지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감소되지만 노인들은 물리적으로 더욱 고립되거나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어린 자녀들은 가정 내 설치된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말을 배우고, 인터넷 동영상 등으로 운동을 배우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집밖의 사람들과 훨씬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한편 대체에너지, 그린에너지의 보급으로 전통방식의 전력수급체계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외 계층이 생겨난다. 그들은 상승하는 구 전력시스템 전기료를 감당하기 힘

환경	2030년 가족모습
	들게 되며, 그 해결책으로 1-2인 가구들이 하나의 주택 안에 모여 살게 되거나 따로 지내던 성인자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가족원들은 에너지 사용관련 갈등을 빚기도 한다.

## 다.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영역별 정책이슈 도출 및 관련정책의 미래가족과의 조응성 진단

### 1) 돌봄정책 영역

#### 가) 가족미래 대응 돌봄정책 이슈

##### ■ 유기적 돌봄환경의 구축으로 가족의 역동에 대응

- 2030년 가족 미래시나리오는 개인 중심적 가족의식 강화로 성인 파트너 관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성인 가족들 사이의 의무와 규범은 상당히 약화되는 ‘느슨한’ 가족의 본격적 출현을 예고함.
  - 전형적 ‘핵가족’인 양부모가구는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1인 가구, 부부가구보다 그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혼인에 대한 규범의 약화로 사실혼, 이혼, 재혼 등 개인들의 파트너관계 구성 경로는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임.
  - 2030년에는 정형화된 가족모델의 해체로 가족형태의 분화가 심화되고, 개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혼인, 출산, 돌봄의 시기와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필요에 의해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 파트너관계의 자율성과 가족규범 해체는 가족의 역동을 심화시키고 돌봄요구의 분화를 초래함.
  - 2030년에는 가족의 역동이 심화되면서 가족네트워크에 기반한 안정적 자녀돌봄은 어려워질 것이며, 가족규범 해체로 인해 새로운 자녀돌봄에 대한 필요가 등장할 것임. 더 나아가 자녀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

간 확보를 위한 유급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자녀돌봄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임.

- 이에 사회적 조건과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유기적 돌봄환경 구축이 돌봄정책의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함.

#### ■ 노인돌봄에 있어서 세대분리 강화

- 2030년 가족미래 전망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부양과 돌봄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 강화, 둘째,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세대간 친밀성 증가임.
  - 203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3).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율은 2013년 19.5%에서 2030년 35.4%가 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현재 6.9%에서 2030년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3). 이러한 가족변화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 등비공식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 가족가치의 측면에서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어온 노인 돌봄이 가족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가 확산되면서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 특히 자녀의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환경전망에 기초할 때, 2030년 미래에는 가족의 노인돌봄 의무를 최소화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며, 노인돌봄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2030년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돌봄이슈는 기능장애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돌봄지원이슈, 노인돌봄자원의 부족에 따른 돌봄자원 다원화 이슈, 국가주도적인 돌봄서비스 전달 방식의 재구성이슈 등이 제기됨.

#### 나)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분석 범주

- 돌봄정책의 범주는 대상에 따라 자녀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으로 구분함.

■ 자녀돌봄정책 범주는 법령에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두거나 관련 제도, 정책을 명시한 경우로 한정함.

● 분석대상정책: 보육사업,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정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자녀양육지원 및 일가족양립관련 정책임.

■ 노인돌봄정책의 분석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제도임.

관계의 종류	주요 분석내용
부부, 파트너간	-
미성년자녀- 부모 간	[자녀돌봄] 보육사업,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친화기업정책, 가족친화마을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성인자녀- 노부모 간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

## 다) 돌봄정책 현황 분석

### (1) 자녀돌봄정책 현황 및 평가

■ 현행 자녀돌봄정책 특성

● 첫째,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을 국가의 서비스를 통해 대체하는 방식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경제위기로 가족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가족의 주로 담당해온 돌봄을 국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정책이 주로 발달하였음.

-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의 보육사업이 핵심적이며, 최근 제도화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즉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서비스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 비교적 표준화되고 일관된 방식에 따라 운영됨.

● 둘째,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돌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돌봄 자원을 모색하는 등 돌봄을 지원할 사회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들임.

-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고, 자녀돌봄에 대해 사회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는 것임. 부모들의 노동시간과 자녀돌봄 시간 조정 등 노동구조의 변화가 핵심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 그 외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 분담, 대안적인 돌봄의 자원으로 가족 외 관계들을 통한 상호돌봄과 지원이 가능한 공동체 형성 등도 주요 정책으로 포괄됨.

#### ■ 평가 및 가족미래 대응 자녀돌봄 정책방향 도출

- 국가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녀돌봄 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시설보육서비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정착됨. 당분간은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녀 돌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질적 제고는 가족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물리적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명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그러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국가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하며, 표준화된 국가 서비스는 가족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대안으로 일과 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구조 변화 등 자녀 돌봄을 지원할 사회환경의 재구축 정책이 제안되기 시작함.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며, 다주체간 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 2030년 한국인들은 사회적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원함. 일하는 부모들은 자녀돌봄과 유급노동의 균형을 실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 유연한 파트너관계에서 자녀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수 있기를 바라며, 다원화되는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안적 자녀돌봄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러한 미래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국가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자녀돌봄 정책 방향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2030년 자녀돌봄정책 방향은 국가가 일-생활 균형,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대안적 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에 대응하는 사회조건 재구축과 환경조성에 보다 중심을 두고 투자를 늘려가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의 자녀돌봄 서비스는 사회주체들 간의 협력과 자원의 균형적 분배를 고려하면서 역할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할 것임.

## (2) 노인돌봄정책 현황 및 평가

### ■ 현행 노인돌봄정책의 특성

- 공적 돌봄수준 미흡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이용사정시 가족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현금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요가족요양보호시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점 등은 공식 돌봄 체계로서 가족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공식 돌봄의 확대는 현재도 핵심적인 정책 기조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30 가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도 노인돌봄 이슈로 됨.
  -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사업)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의 규모도 3만여명으로 공급이 부족함.
- 일상적 돌봄 지원 부족
  - 현행 공식 노인돌봄지원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돌봄이 필요한 노인다수를 위한 돌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평가 및 가족미래 대응 노인돌봄 정책방향 도출

- 현행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정책 목표가 가시화되었

고, 공적돌봄 정책 추진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등장하였음. 그러나 공적 돌봄수준의 미흡으로 가족돌봄을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가족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돌봄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2030 가족미래 관점에서 도출된 노인돌봄정책 이슈를 고려할 때 정책목표는 사회적 돌봄의 실현임이 부각됨. 노인 돌봄의 사회화는 2013년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즉 2030년 노인돌봄정책 방향은 장기요양에 대한 공적 돌봄지원 수준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의 실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는것 이어야 할 것임. 즉 일상돌봄지원서비스체계의 구축, 일상돌봄지원을 위한 돌봄자원의 다원화를 이루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공적돌봄의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
- 동시에 노인돌봄정책의 추진방식을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노인돌봄제공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도록 함.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는 시설, 기관이라는 공간개념을 넘어선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식돌봄/비공식돌봄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돌봄의 사회화를 조직할 수 있게 함.

## 2) 소득보장정책 영역

### 가) 소득보장정책 이슈

■ 세대간 분리강화와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 가족변화의 다차원적 관계 중에서도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성인이 된 자녀세대는 노인이 된 부모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더 이상 없으며, 세대간 사적 이전의 비중은 점차 감

소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는 충분하지 않아 노인빈곤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세대간 동거가 감소하는 가운데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녀세대의 노인세대 부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 파트너관계 자율성 강화와 가족정책으로서 자녀부양

- 이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파트너관계는 유연하고 느슨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
- 가족의 유연화 및 개인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은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대되어 가족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것이 빈곤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배우자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제도 및 제도적 혼인관계를 벗어난 자녀부양이 가족 내에서 지속되기 어려움.

#### ■ 이에 한국에서 탈가족화의 개념은 소득보장영역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가족은 소득보장영역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
- 실질임금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급속하게 개인화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가족부양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 나)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분석 범주

- 소득보장정책은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보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제도, 가족관련 수당제도를 대상으로 함.

관계의 종류	주요 분석내용
부부, 파트너간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의 개인화 · 국민연금: 개별수급권, 파생수급권
미성년자녀- 부모 간	[소득보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비용지원 · 공공부조: 급여수준 기준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유형 고려) · 아동관련 수당: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선지급수당, 세제혜택 등
성인자녀- 노부모 간	[소득보장] 노인의 탈가족적·독립적 소득보장 · 국민연금: 노인세대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 · 공공부조: 수급단위 및 자격(수급단위 및 부양의무자 범위)

## 다) 소득보장정책 현황 분석

### (1) 기초생활보장제도

#### ▣ 제도 현황 및 평가

- 현행 제도는 포괄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을 전제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및 급여액 결정단위는 ‘가구’로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의 배우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함.
  -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또는 미약한 경우(간주부양비 차감하여 지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 징수)에 한정하여 급여를 지급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범위 및 판정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개편안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가구단위 보호 원칙은 유지되고 있음.
  -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등 비전형적 가족의 경우 제도상 전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적부양 체계가 실제 작동하기 어려워 적절한 소득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급여 산정시 기준가족의 경직성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구를 표준가족으로 최저생계비를

- 계측하며, 가구원 수만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정하고 있음.
- 실제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가구형태를 반영한 추가비용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여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음.
- 현재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으로는 기준가족 외의 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 (2) 국민연금제도

### ■ 제도 현황 및 평가

#### ● 개별적 수급권

-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불안정한 고용지위, 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단절 등 짧은 생애근로기간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예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고 있음. 현행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수급권 획득이 가능함.
- 가입기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되고 있음. 자녀 2인인 경우 자녀당 12개월씩 부부 중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10인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1/2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을 운영함.

#### ● 파생 수급권

-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비중이 감소중이고, 기본연금 인하에 따라 급여수준이 함께 낮아지고 있음.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이혼한 경우 전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분할연금은 많은 경우 적절한 소득보장 수준이 되지 않으며 특수직역연금에는 미적용되고 있음.

#### ● 노인세대의 경제적 독립성

-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동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3) 가족관련 수당제도

#### ■ 제도의 현황과 평가

- 보편적 아동수당의 부재 속에서 부분적 아동양육비용 지원제도가 존재함.
- 특정한 인구학적 요건에 대한 저소득층 중심 급여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등이 존재함.
- 자녀양육비 관련 공제제도로서 위탁아동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있음.
-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

### 3) 가족법 영역

#### 가) 가족미래 대응 가족법 이슈

##### ■ 가족변화 반영한 가족법제도의 입법화

- 미래가족의 특징으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과 다양한 가족출현은 가족의 개별화 개인화의 모습을 나타냄. 이에 가족안과 밖을 둘러싼 성, 세대, 연령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간 갈등가능성을 내포함.
- 이에 가족규모 및 형태와 가치관 등 가족의 모습에 대해 가족을 보는 시각과 규범을 반영하는 가족법제도의 입법적 조치 필요.

#### 나)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가족법 분석 범주

- 가족법은 친족법, 혼인법, 친자법, 부양법, 상속법을 대상으로 함.

관계의 종류	주요 분석내용
부부, 파트너간	<p>[가족법] 법적 혼인관계의 느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족법: 가족법개정에 따른 가족개념변화, 현행민법상 가족과 친족범위,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li> <li>· 혼인법: 혼인, 이혼, 사실혼</li> <li>· 상속법: 현행법상 상속제도,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li> </ul>
미성년자녀- 부모 간	<p>[가족법] 미혼, 이혼시 부부간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자법: 민법상 친자법</li> <li>· 부양법: 민법상 부양법과 기본구조, 부양을 받을 권리의 특징,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li> <li>· 상속법: 현행법상 상속제도,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li> </ul>
성인자녀- 노부모 간	<p>[가족법] 성인자녀-노부모간 법적 부양범위가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법: 민법상 부양법과 기본구조, 부양을 받을 권리의 특징,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li> <li>· 상속법: 현행법상 상속제도,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li> </ul>

## 다) 가족법 현황 분석

### (1) 친족법

- 가족의 개념과 범위만 규정, 요건효력 무규정
  - 가족(779조)와 친족(777조)의 범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확일적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가족이 아님.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 배치되고 있음.

### (2) 혼인법

- 법률혼 중심의 혼인제도
  - 혼인에 있어서: 신고혼인주의. 남녀평등한 혼인을 전제하고 있음. 이혼에서는 협의이혼 요건의 강화, 재산분할청구권, 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시행됨. 사실혼의 경우는 엄격한 해석과 함께 법적 보호의 한계가 있음.

### (3) 친자법

#### ● 혼인을 기초로 한 친자법

- 현행 친자법은 혼인을 기초로 자의 종류, 인지제도,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입양의 이원적 규정(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병존)으로 되어있고, 혼인의 출생자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음.
- 혼인의 가족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행 친자법의 구조(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 재고 필요함.

### (4) 부양법

#### ● 혼인과 혈연에 의한 부양관계

- 민법에 혈족과 인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친족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혈연과 혼인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친족 그리고 친족간 부양은 허용되지 않음.
- 현행법상 부부 사이의 부양은 혼인공동생활 중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함.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생부, 생모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만, 적모, 계모, 계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 부담하고 하고 있음.

### (5) 상속법

#### ● 유류분 제도로 유언의 자유 제한

#### ● 공동상속제

- 남녀의 상속분, 직계비속의 상속분,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의 상속분 차별철폐, 배우자상속분 가급.

### 3 정책제언

#### 가. 가족미래 대응 돌봄정책 제언

##### ▣ 가족미래 대응 자녀돌봄 정책 제언

#### 제안1) 일-생활 균형 강화를 통한 일상적 돌봄 보장

- 미래 가족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과 자녀돌봄의 조화를 원하고 있음. 이에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시간보 험제도 등과 같은 제도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함.
-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1인기업, 소기업 활 성화(협동조합 모델 대안) 등을 대안으로 적극 모색함.
- 단, 유연근무형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저숙련·저임금 전일 제 근로부모들을 위한 공적 자녀돌봄서비스는 우선 지원하는 등 별도 방안을 추진함.

#### 제안2) 아버지들의 역할행동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가족내 동등한 역할 분담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 남성 이 돌봄의 책임자로 행동하도록 아버지 역할 전환을 돕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제안3) 돌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지역사회 시민네트워크, 지역사회 공동체는 기존에 정부가 제공 해 온 자녀돌봄 서비스의 대안적 사회화 방안임. 지자체는 지역 내 자생적 부모들의 모임 참여, 시민단체들의 돌봄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모임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지원함.

#### 제안4) 균형을 고려한 자녀돌봄서비스의 역할 재정립

- 정부의 자녀돌봄서비스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부모,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간 협업체계와의 균형을 고려, 공급량을 조절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 가족미래 대응 노인돌봄 정책 제언

##### 제안1) 일상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 2030년에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은 1인가구, 노인가구임. 현재의 노인돌봄지원의 주요 정책 대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집단이며, 일상적인 돌봄지원은 저소득층 노인1인가구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현재 1인가구 증가 추세와 이들이 고령화될 미래를 고려하여 일상돌봄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도록 함.

##### 제안2) 돌봄자원의 다원화와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형성

- 2030 미래에 가용한 돌봄 자원을 활성화함. 일상돌봄은 기관이나 돌봄제공인력 등의 개념이 없이, 탈공간화된 사람과 사람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돌봄이 가능하게 함.
- 기능장애정도가 낮은 수준인 노인의 경우에도 생활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과 지역사회의 이웃사람들과의 돌봄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제안3)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 노인돌봄으로 인해 개인의 일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증이상 기능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이외에 노인 요양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간 수준의 기능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활성화시킴.

## 나. 가족미래 대응 소득보장정책 과제

### ■ 가족미래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제안1) 수급단위 및 자격에서 가족 부양범위의 축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급여단위 및 자산조사 단위를 핵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음(Eardley et al, 1996). 핵가족은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신청자, 배우자, 그 자녀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가족임.
- 점차 가족관계가 개인화되고 가족간 부양이 유지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수급자격 및 단위에서 가족의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급여단위를 핵가족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산조사 범위도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있어 엄격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급여개편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제한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인자녀-성인부모간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가족의무범위의 최소화는 사회적 낙인이 적은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고려되어야함.

#### 제안2) 급여수준에 가족유형 적극적 반영

-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급여액 산정시 커플여부, 자녀연령, 가구원수, 가구특성(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등을 반영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가구유형이 급여산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져야할 것임. 법률상으로는 최저생계비 산정시에 가구유형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 가족미래 대응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 제안1) 개별적 수급권 강화

-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일하는 여성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점차 완화하며, 양육 관련 크레딧을 확대시켜야함.

### 제안2) 파생수급권 약화

- 해외 국가들에서는 파생수급권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욕구(가구원수, 미성년자녀유무 등)에 따른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이 발견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파생수급권은 단계적으로 약화하면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할 것임. 욕구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분할연금에는 본인 연금이력을 추가하여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제안3) 노인세대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고용율, 출산율 제고 및 보험료 기반 확대와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 현행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 가족미래 대응 가족관련 수당제도의 개선

### 제안1) 한국에서도 수당 형태의 안정적인 가족급여 도입

- 해외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 양육비대지급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급여를 운영하여 유자녀가족의 탈빈곤에 기여하고 있음.
- 자녀양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국가책임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함.
- 보편적 수당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요청되며, 양육비용의 ‘탈가족화’는 양육책임이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와 직결됨.

## 다. 가족미래 대응 가족법 정비과제

### ■ 가족미래 대응 친족법 정비

#### 제안1) 가족범위규정의 비명문화와 가족개념의 재정의

-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 출현을 반영하는 가족법 위 정비.
- 가족범위 정비기반위에 일상생활의 평등과 정의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 가족의 개념 재구성.

### ■ 가족미래 대응 혼인법 정비

#### 제안1) 사실혼관계자들의 법률관계에서 배우자의 보호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실질적인 중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

## 제안2) 대안적 가족의 출현에 대한 혼인법제화

-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 성적 지향의 법적인 선택권의 인정 등
- 법률상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동성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인정(사실혼 성립요건의 준용 등)

### ■ 가족미래 대응 친자법 정비

## 제안1)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 미래가족으로 동거출산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혼외자의 보호를 위하여(예: 독일민법 제1615조의1) 미혼모의 양육보장과 자의 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명문규정 신설
- 혼외자의 성과 본의 결정, 인지제도의 활성화 등

## 제안2) 양자제도의 정비

- 미래 가족구성에서 양자를 통하여 법정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수요도 증가할 것임. 이에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규정의 보완과 입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 ■ 가족미래 대응 부양법 정비

## 제안1) 사적, 공적부양의 적용범위 명확화

-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를 재검토하고, 가족들의 부양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공적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 제안2) 이혼후 부양의무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부양청구권 제도 도입

## 제안3) 부모의 미성년자녀 1차적 부양의무 명문화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모에게도 제1차적 부양의무 인정

### ■ 가족미래 대응 상속법제도 정비

## 제안1) 유류분액을 낮추고 유류분권자 제한

## 제안2)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인의 범위 조정과 상속순위 재고

## 제안3)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조정

- 배우자의 상속분 증가

## 제안4)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

- 유언자유의 확대와 유언제도의 활용(사실혼 배우자와 의부모·의 자녀의 보호, 유산기증문화의 확산 등)

## 4 기대효과

- 가족미래의 여성·가족정책 통합적 정책아젠더 설정과 세부 정책과제 로드맵 작성의 기반 제공(4개년 기획연구의 최종년도 2014년 연구 추진 기반)
  - 이를 통해 가족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인구,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이 국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과 가족에게 정책이 적용되는가를 실질적으로 그려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제5차여성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국가 중장기전략 추진에서 여성가족분야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참고자료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김수완(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  
가족정책전망(Ⅲ).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사업과,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제도과,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